

개인파산 신청 30% 급증…‘빛수령’ 빠진 20대 청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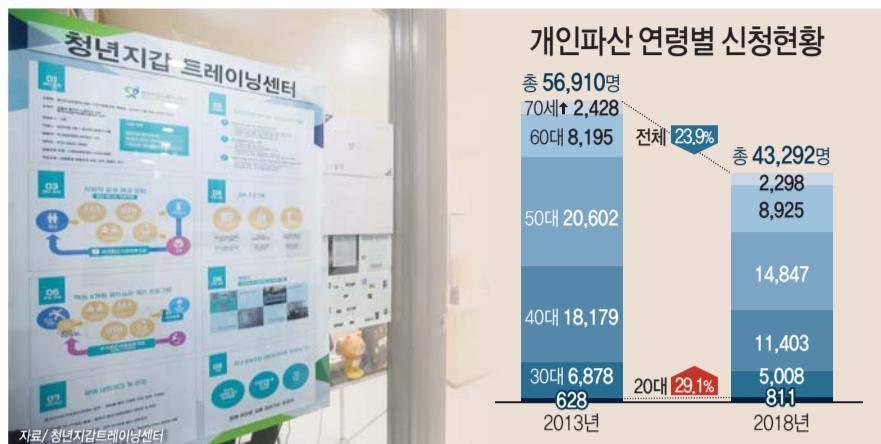
(5년간)

전체 파산신청은 24% 줄어드는데 20대 가구주 가계부채 13% 늘어 직업 없으면 각종지원 ‘자격미달’ 청년 부채·미래설계 등 상담 절실

20대의 개인파산 신청률이 5년만에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나 근로자가 아닌 청년층의 경우 공적지원도 받기 어려워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청년층에 대한 신용상담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20대 파산 신청률 급증…‘빛수령’

9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내지갑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개인파산 신청은 2013년 대비 지난해 1만3618명(-23.9%)이 줄었다. 반면 20대의 경우 파산 신청 인원은 183명(29.1%)이 증가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또한 5년간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가 5.95% 증가한 가운데



20대 가구주의 가계부채는 13.39%가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학생이나 근로자가 아닌 20대의 청년층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청년 채무자를 위한 공적지원이 대부분 학생과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지원제도는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고, 청년층의 학업·구직에

필요한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햇살론 역시 3개월 이상 월급을 받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에 다니지 않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청년층이 고금리 불법대출로 내몰리는 채무 위험을 겪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 센터장은

“기존에도 서민금융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의 공적상담기관이 있으나 청년들 중 상당수가 이를 기관에서 채무상담을 받는 것을 꺼린다”며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확실한 가능성을 알기 전까지는 상담기관에 문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청년층 위한 전문상담 ‘절실’

그는 이어 “청년층을 위한 채무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기관에서 청년층에 특화된 상담사를 교육해 상담의 질을 제고하고, 청년전문 상담기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당장의 부채 등 생활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미래 설계와 같은 생활경제 역량을 향상시키는 상담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년층을 위한 공공 자금 지원제도를 보완할 민간기구로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이하 청지트) 등이 있다. 청지트는 청년층을 위한 재무교육

과 더불어 채무·신용·금융·재정관리 등 청년층의 직접적인 재무 문제 해결을 위한 1대 1 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진행한다. 현재 서울·광주·대구센터를 설립했고, 서울센터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전문상담사 29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민간기구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모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센터장은 “청년층의 생활경제 문제는 전국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규모로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며 “민간 기구들이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상담의 질적 측면에서도 현상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층을 위한 맞춤 채무상담 프로그램 등 콘텐츠에 대한 개발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소득 줄었지만 삶 윤택해졌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설문

직장인 51.7% “삶에 영향 줬다”
87.1% ‘긍정적’ 21.9% ‘부정적’



상 많았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는 ‘취미 등 여가 생활 가능’(49.2%, 복수 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정시 퇴근 분위기 정착’(40.3%), ‘가족과의 시간 확보로 만족도 증대’(39.7%), ‘과로 등에서 벗어나 건강이 개선됨’(34.4%), ‘업무 능률이 상승함’(27%), ‘업무 의욕이 상승함’(11%) 등이 의견이 이어졌다. /한용수 기자 hys@

중기업계, “中企 특화은행 인가해 달라”

중소단체, 이해찬 대표 등과 간담회 경제활력 제고 등 과제 45건 건의 최저임금 영세업종 구분적용 요구

중소기업계가 여당 지도부를 만나 ‘중소기업 특화 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공동 현안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요청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오랜 숙원인 공동행위도 허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 간담회를 갖고 현장과 서면을 통해 총 45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여당에 전달한 건의집 분량만 총 99페이지에 달한다.

경제 활동 제고, 투자 활성화, 현장 애로 해결 등을 위해 여당 핵심 관계자들을 만난 김에 종합적으로 건의를 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흥의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권칠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국내 금융산업이 과도한 진입규제로 인해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 은행을 인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특화(전문) 은행 설립’은 김기문 회장이 올해 2월 회장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기업 전문은행인 ‘KBIZ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다 쌓 수수료로 대출하고 각종 보험상품과 보증공제 등을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건의서에서 중소기업계는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해소하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 각 업종별 신용평가 모델 등이 도입되기를 위해선 기업금융부문의 경쟁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소규모 은행업 추가 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여당에 재차 요구했다.

▲영세업종 소상공인 구분적용 ▲결정기준에 경제·고용상황, 기업의 지불 능력 포함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에서 위원회 방식 유지시 경제 여건상 필요할 경우 노사의견 참고해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공익위원회 임명절차, 위촉기준 개선 ▲최저임금 결정주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년 최저

임금이 막바지 협상중인 가운데 중소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근로기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하고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조속히 통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산자중기위가 심의 중인 관련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합법적 공동사업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이외에 중소기업계는 이날 현장과 서면을 통해 ▲개성공단 조속한 재개 및 국제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노란우산 공제금 이자소득세 과세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대상에 공기업도 포함 등의 건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김승호 기자 bada@

‘경기 민감’ 반도체, 코스피 시총 12% 차지

» 1면 ‘반·바 외 살게 없다…’서 계속

하지만 배당·지배구조·대북리스크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3요소가 모두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가는 요지부동이다.

이재원 한국투자밸류운용 대표이사는 “북한 리스크는 반 이상 해결됐다. 지배구조 역시 시대적 흐름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한국 증시를 누르고 있는 리스크는 산업 구조의 취약성”이라고 분석했다.

◆ 결국 문제는 한국

금융투자업계는 코스피지수를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다’고 말한다. 글로벌 증시가 모두 오를 땐 조금 오르고, 내릴 땐 더 큰 폭으로 내리기 때문이다. 실제 연초 이후 지난 8일까지 중국